



바다의 품으로 물질을 나가는 해녀의 모습에서 강인한 제주의 힘이 느껴진다. 이제 제주 바다는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거센 바다로 뛰어드는 해녀의 마음에도 따스한 봄기운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제주 역시 새로운 시작이기를 바란다.

“화두는 ‘방역’과 ‘경제회생’, 대비책 마련해야”

제402회 임시회 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2회 임시회가 2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본회의에서는 도내 공무원 선서문을 수정하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39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제주작가 미술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조례와 남북 장애인들의 스포츠 및 문화예술 교류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개정돼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JDC의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들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대거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의 현재 민심의 화두는 ‘방역’과 ‘경제회생’”이라며,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 속에 과거 명성을 날리던 호텔들마저 폐업선언을 하는가



하면 연초 최악의 마이너스 경제성장 지표들이 속속 공식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제주 지역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만 하더라도 2020년 약 18조 원으로 전년 대비 6.6%가 감소해 전국 평균보다 8배나 하락했다”며, “이는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6%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연간 실업률도 3.1%로 역대 최고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다”며 “심지어 계층간 소득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도민의 40%가 가정 내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또 최근 선거국면 속에 공무원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생에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도청 고위 공직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까지 제기된 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3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지면 안내

제402회 임시회 개최 ▶ 2

주요 이슈 ▶ 4



생생 의정활동 ▶ 8~9

함께합시다 ▶ 10~12

특집 ▶ 14~15

사무처 소식 ▶ 16

“국비 감소, 도정 역량 미흡, 특별자치도 폐지 고려해야”



좌남수 의장 개회사서 피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2월 8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이 지났지만, 도민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며 “특별자치도 타이틀에 걸맞게 전문적이고 차별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은 기대 이하이며, 제주도정 또한 매번 정부 설득에 실패해 법령이 정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마저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특히 특별자치도의 본질은 자기 결정권과 자주 재정권에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냐”며 “자기 결정권 없는 분권, 특별자치는 아

무 소용이 없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비교하더라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되고 말았다. 자칫 초라한 시범 자치도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도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명시하고 있지만, 도민이라면 누구나 수긍할만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진 않았다”며 “자치단체 부활, 시장 직선제조차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더군다나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폐지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교육의원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자주 재정권과 관련해서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추진동력인 정부의 재정지원은 해를 넘길수록 줄어들었다”며 “제주자치도의 예산 규모가 2007년 2조 222억 원에서 지난해 5조 5598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마찬가지로 15년째 전국 대비 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2007년 7404억 원에서 지난해 1조 4839억 원 늘었지만, 이 역시도 전국 평균 증가율 228%에 반해 제주는 100% 정도 증가에 그쳐 전국의 절반 수준이며, 전국 대비 비중도 3.5%에서 2.1%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방세 수입은 전국 최소 규모인 데다 2007년 418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5224억 원으로 264% 늘어나면서 도민이 낸 세금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다”며 “균특회계 보조금은 2008년 4070억 원에서 지난해 2403억 원으로 41.0%나 감소돼 전국 대비 비중이 7.2%에서 4.2%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정부의 균특회계

총액 대비 제주계정 예산 비중은 거꾸로 가고 있다. 2007년 3476억 원, 5.2%를 차지하던 것이 지난해 2111억 원, 2.1%로 하락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좌남수 의장은 “사정이 이러다 보니 특별행정기관의 균특분도 매년 감소하면서 늘어난 사무와 인력 증가분에 따른 증당은 지방비로 메꾸어나가며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자치도가 아니었다면 국가 지원지방도와 국도 건설관리, 신항만 건설, 환경처리시설 구축 등의 소요 사업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라며,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도비로는 예산이 없어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못 하면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환경출장소 등의 기관은 차라리 국가에 반납해 도민 혈세라도 절약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지만, 이에 합당한 국가 재정지원 비중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특별자치도의 민낯이다. 이쯤 되면 특별자치도마저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상 확충·복지안전망 강화 주력”

구만섭 도지사 권한 대행 밝혀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월 8일 “올해 제주도는 제주를 제주답게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제4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탄탄한 방역과 신속한 의료체계 전환으로 도민의 일상을 되찾겠다”며,



“방역과 민생의 조화를 위한 일상회복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등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격리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연구과제도 수행하겠다”며, “아울러

재택치료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통해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우리 세대의 책무”라며, “꽃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오름 탐방 총량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은 제주의 미래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일자리 수를 회복해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겠다”며,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 1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제주형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3월 모든 학교 정상 입학·등교 수업”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인사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방역과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면서 3월 모든 학교의 정상적인 입학식과 등교수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유·초·중·고 및 특수 학교 등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미만으로 낮춰 밀집도를 완화



하겠다”며, “아울러 방역 물품을 안정적으로 비축하고 방역 인력을 확충하면서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4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건강과 안전의 기반 위에서 학습복지

를 더욱 두텁게 하고, 2022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의 미래 교육 체제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면서 교육 회복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첫째,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 실현,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셋째,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넷째,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다섯째, 3차 산업 혁명 시대 미래교육 확대, 여섯째, 기후위기 대응 지구생태시민교육 활성화, 일곱째, 제주 교육자치 강화,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따뜻한 미래교육 실현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평화공감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아이들이 배려, 협력하면서 평화를 키워가고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다혼디배움학교와 4·3평화인권교육, 제주 이해교육,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 등을 더욱 충실히 추진하면서, 아이들을 삶의 주체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제주 고속철’ 도민 뜻 따를 것, 특별자치도 완성하겠다”

민주당 김희현 의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은 2월 8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언급한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신설’ 관련 ‘전남-제주 해저 터널 건설’에 대해 “도민들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울-제주 고속철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도민 여론 조사의 결과를 떠나, 과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대립의 극심한 갈등을 다시는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도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겠다”라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도민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11대 의회, 지난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오로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시간

이었다”라며, “불가능할 것으로만 보였던 4·3특별법의 전부개정은 물론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까지 이루어낼 수 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김 의원은 “이제 한 달 후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환의 이 중요한 시기에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위기를 극복해내는 실력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제주의 회복과 도

약을 이끌 준비된 리더십, 소외받는 도민들이 없도록 하는 섬김의 리더십, 경청하고 소통하며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배제하고 지역과 세대의 통합을 실현할 포용의 리더십, 우리 시대가 원하고 대한민국과 제주가 원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은 제주를 자치분권과 탄소중립의 모범도시로 키워낼 것”이라며, “미완의 특별자치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 조속히 추진해야, 교육의원 일방적 폐지 법안 잘못”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2월 8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언급한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신설’ 공약을 비판하며, 정부에 제주 제2공항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주 제2공항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기에 국방과 안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올해 첫날 휴전선에서 탈북민 월북사건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새해 첫날부터 최전선 철책 감시망이 뚫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들 사이 이념적 갈등으로 내편 내편식의 양극화가 최고조”라며, “이것이 정말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의 결과인가”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2년 예산은 607조 7000억 원, 국가채무는 국가 1년 예산보다 많은 1064조 4000억 원으로 4년 사이 420조, 약 64%가 증가했다”라며, “우리 아이들 한 명이 태어나는 순간 2000만 원의 빚을 떠안고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전국 집값이 14.97% 뛰면서 과거 외환위기 때 집값이 급등하던 2002년 16.43% 이래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정책 실패라고 분석하고 있다”며, “그래서 최근 이재명 후보도 오죽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와 함께 제주만이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관련해 지난해 3월 특별법 개정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논의된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자치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주도와 의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게 회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도 없이 서울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의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결과는 둘째치고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의원 폐지는 제주특별법 부정하는 것, 개악 막아야”

미래제주 김창식 교육의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김창식 교육의원은 2월 8일 제402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의원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제주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가족을 포함한 도민 모두는 제주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악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인류의 생존 의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뉴노멀을 요구받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보금자리였던 학교도 그 존재와 가치를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제주교육 역시 급격히 다가오는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이라는 과제를 안고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제 교육의원 제도가 탄생한 이후 네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전국 유일의 교육자치 모

델로서 제주교육을 견인해왔다”라며, “그러기에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의원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제주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주 교육사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게다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빼앗고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앗아가려는 행태는 교육자치는 물론 ‘제주특별법’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 2월, 국회의 시계는 제주교육자치의 근본인 교육의원제도 폐지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루는

긴박한 시기”라며, “이렇게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그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교육자치가 이루어 놓은 성과를 외면한 채, 중앙정부의 정치 논리로 제주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개악을 저지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교육 목적은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설정돼야 하며 인격 완성, 자아실현, 민주시민 양성에 있다”며, “제주교육의 미래비전도 시대적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정의에 따라 새롭게 이해되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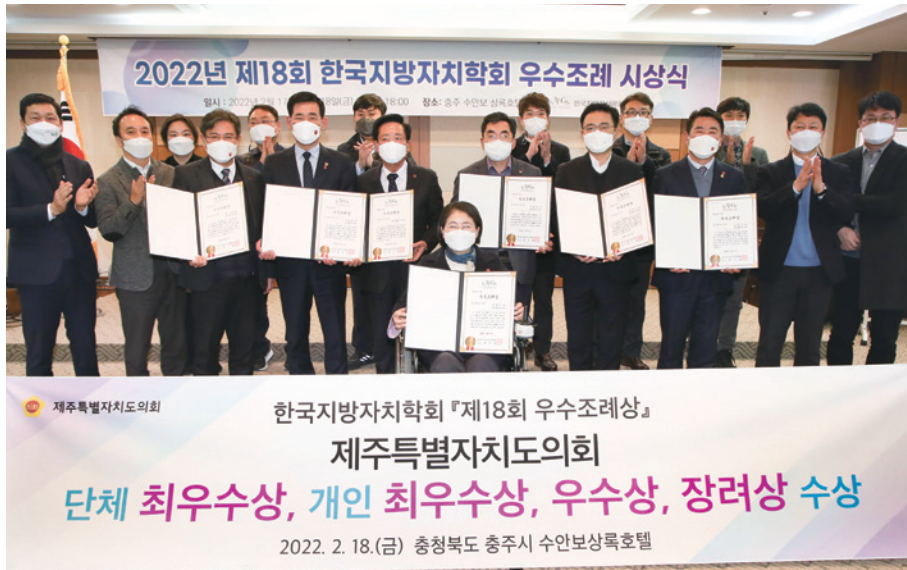
제주도의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우수상 수상 '쾌거'

제18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이경용 의원 개인부문 최우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과 함께 개인부문에서 이경용 의원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성민, 강철남, 박호형, 현길호 의원이 우수상을, 김경미, 송영훈, 임정은 의원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에서 발의했으며, 지방의원이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거래신고제가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에는 이경용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굴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선정됐으며, 이 조례는 제주 감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버려지는 굴피를 활용하여 6차 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이다.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강성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철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박호형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현길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송영훈 의원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임정은 의원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그간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매우 기쁘다"며 "제11대 도의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연구활동, 창의성과,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조례를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2월 18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상록호텔에서 개최됐다.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모색

제주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1월 20일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관 합동 간담회는 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도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지원 관련 민간단체를 비롯해 제주도 및 도교육청의 관련 행정부서 등 12개 기관이 처음으로 함께 참여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기관단체별 추진 사업 및 정책을 공유하고 2022년도 제주형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대응 전략을 공동 모색했으며, 특히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본격화를 대비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 도내 남북협력사업의 선택과 집중,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관·단체 간의 정보공유 및 연대 및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강민숙 위원장은 "이번 민·관 합동 간담회가 도의회 제안으로 처음 열리게 되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의회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제주형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

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강민숙 위원장, 김대진 부위원장, 고은실 위원, 김경미 위원, 김장영 위원, 박원철 위원, 양병우 위원, 이경용 위원, 현길호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2030 세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통일이란?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위 민주평통 제주청년위원회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1월 27일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청년위원회와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2030 청년세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기성세대와 2030 청년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 2030 청년세대들이 생각하는 '대북관계 및 통일인식', 통일을 위한 기성세대의 역할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함양 및 도민 통일역량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의 분야에 서 양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제주포럼 정체성 정립 및 국제적 위상 강화 필요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는 2월 10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2022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제주포럼의 정체성 정립 및 위상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세계평화의 섬 조성을 위한 핵심 실천 수단으로써 제주포럼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제주포럼이 그동안 동북아시아의 공동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국제적인 공감대 확산에 기여

해 온 만큼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다자대화의 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최근 개최된 제주포럼은 세션 및 프로그램 숫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온 것은 분명하지만 내용면에서 포럼의 성격과 취지에 벗어난 끼워넣기식 주제가 많았다”면서, “도가 주관한 프로그램 역시 국제적 수준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우리들만의 리그’식의 주제가 많아 ‘평화포럼’으로서 정체성을 전혀 찾



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국제 포럼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백화점식 의제설정은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평화’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포럼의 정체성을 정립하

고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사 주최로서 포럼의 목표와 장기적 운영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제설정을 비롯한 행사준비와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각별히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공약 빈약”

제주도내에서 오랜 기간 커다란 화두로 제시돼 온 ‘행정체제 개편’ 및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이

도2동을)은 2월 1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의 제주공약 중 지방자치분권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가 부활해야 하고 기초의회도 반드시

강 의원은 먼저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개인적인 소견”이라며 “법인격의 기초자치단체

만들어져야 한다. 특별자치행정국 등에서 적극적으로 공약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설명하며 “제주에서 큰 과제로 이야기됐던 것이 행정체제 개편인데 이에 대한 공약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회취약계층 방역 체계, 제주도 대응 방안 미흡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대응 체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월 11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향해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방역 체계 가동으로 혼선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장애

인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질의했다.

임 국장이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인 등의 분들에게 대해서는 백신접종이나 PCR검사에 대해 방문접종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태봉 국장은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역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의 경우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등



으로 분류되는데, 집중관리군에서 취약계층이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장애인이라던가 미접종자가 많은 소아 및 청소년 등은 집중관리군에 포함돼 관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9일 최근 개원한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재난 사각지대 해소 위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김대진 의원 조례안 발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희망하는 민간시설에 정보제공 등의 기술지원과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공공 외 민간 영역에서도 자율적으로 자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난



로써 재난정보 수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 취약한 안전 취약계층이나 재난을 인지하지 못한 주민에게 재난의 위험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시킴으

조례안을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제주가 더 이상 안전지역이 아니다. 재난 발생 시 재난 문자 등을 통해서 재난정보가 전달되고는 있으나,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한 개인이 최종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공동주택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시설에서 재난상황 전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도 차원 지도감독 강화해야

환경도시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화북동)는 2월 10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이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에 대한 사전예방과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로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제주의 건설현장에서 지난 1월 광주 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감량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감량기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현황과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급식실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의 업무 협

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유해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활동범위가 한라산 중심에서 중산간 지대로 확대되면서 가축, 농작물 등의 피해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해제된 노루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며, 또한 야생화된 들개로 인한 가축 그리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안덕·대정지역의 미분양수가 줄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 건이 접수되고 있어 행정에서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차고 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부작용·문제점 등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 및 분석하여 보완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DC 제2첨단과기단지 동의안 심사보류

JDC가 추진 중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제2첨단과기단지) 환경영향평가 의회동의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제40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화북동)는 2월 16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심사 보류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

면)은 제2첨단과기단지 입지가 균형개발과 재해예방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또 중산간 지역에 들어설 제2첨단과기단지가 기후위기로 이례적인 집중강우 현상이 빈번해진 상황에는 재해에 취약할 위험성도 언급했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임시회 기간인 2월 11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구좌읍 동북리에 위치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지를 현장 방문했다.

제주도립예술단 전문인력 확보 ‘차일피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도립예술단의 전문인력 확보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 조직이 비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2월 9일 제402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 더불어민주당, 삼양)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3년 전부터 건의했는데 개선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도립예술단 행정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 서귀포예술의 전당과 달리 제주문화예술회관과 제주아트센터 조직 체계는 행정인력이 70~8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연운영팀과 시설관리팀만 있어 ‘최소한 공연기획팀은 만들어야 한다’고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나면 잊어버리더라”며,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겠다는 구호로만 그칠 수 있다. 예산과 조직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에 “전문인력 확보 문제는 올해 문화예술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기에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해 도립예술단 통합 운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현재 도립예술단 총단장이 행정부지사, 도립무용단과 도립제주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도립서귀포예술단(관악단, 합창단) 단장은 문화예술진흥원장, 제주시 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각각 돼 있는 것이 “분절된 구조”라고 지칭했다.

사진예술의 가치 보존을 위한 정책 간담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가 주최하고 김항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이 진행하는 ‘도내 사진예술 가치 보존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2월 16일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안창남 위원장은 “제주의 민속·역사

를 담은 사진 자료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음에 따라 도내 사진예술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첫걸음으로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이창훈 회장이 ‘제주 사진예술 플랫폼 조성이 절실하다’를 주제로 발표하며, “사진은 예술적 가치와 더불어 한 시대를 기록하고 역사를 담는 시대적 가치가 있다”면서 “이러한 사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사진예술 플랫폼 구축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도내 사진예술 분야의 기록과 보존방법의 문제점을 짚고 ▲온·오프라인 사진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대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사진예술 가치보존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시됐다.

“보름왓 풍력발전단지 주민 수용성 확보 미흡”

농수축경제위원회

전국 최초 ‘주민 참여형’ 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보름왓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2월 15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미래전략국 업무보고에서 “보름왓 풍력발전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민원의 양상이 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쪽으로 변지고 있다”며, “현재 감사위원회에 감사가 청구돼 있는데 감사위 절차 이후에도 법적, 물리적인 부분까지 갈등이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이어 “행정이 합법적인 절차를 정당히 했는데 일부 문제제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공익적 측면에서 우려된다. 그래서 이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해 나갈지는 상당히 지역사회에 주는 갈등관리 부분에 의미가 크다”며, “예전같이

행정이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조율을 해서 지역에서 원하는 다양한 요구조건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고윤성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도의회에서 보름왓 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에 동의해 주신 조건이 주민 수용성 확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하게 여기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서 결과에 따라 준비할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복지 실현 반려동물 선진문화 조성 기대



동물보호센터 방문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더

불어민주당, 조천읍)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2월 14일 제402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 일정으로 제주도 용강

동 소재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과 규모를 살펴보고 제주도의 유기·유실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발생 실태와 적정 수용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 등을 점검해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현길호 위원장은 “특히, 제주도 어음리 소재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가 어음2리 주민들의 유치 수용으로 설립에 탄력을 받고 있다. 오는 2024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가 준공되면 제주지역 유기·유실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는 물론 동물복지를 포함한 반려동물 선진문화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반발 지속되면 다른 고교 신설부지 검토”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제주시 동부)는 2월 9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으로 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신제주권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이 ‘불통’ 문제로 계속해서 제주고 동문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며, “신제주권 일반계고 신설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나”라고 질

의했다. 이에 강애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지난해 11월 5일 고교 신설 도민토론회가 무산된 이후 11월 26일 제주고 동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그러나 올해 1월 제주고총동창회 임원진 등이 새롭게 구성된 이후 아직까지 협의를 위한 정확한 만남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밀집도 완화 위해 신제주권 일반계고 신설을 필요한 부분”이라며, “제주고 동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



지만, 그럼에도 반발이 계속될 경우 무리해서 제주고 부지 내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학교부지 선정을 검토하면서 제주시 동지역 고교 신설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법적 지위 확보”

학업중단 대안교육조례 개정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안정적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법률 제정안이 발의돼 최종 의결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정민구 의원(사

단·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2일자로 시행된 ‘대안교



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

시하고 있다. 정민구 의원은 “그간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며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대안교육기관으로의 등록업무를 교육감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강성균 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도내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관련 전

문인력 확보 및 연수방안,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우수 교육사례가 인근 학교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성균 의원은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금융지식을 습득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여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이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해 특히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경우 제시되거나 규정이 없으면 간과하기 쉬워, 일반적으로 조례 규정에 장애

인 관련 사업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그동안 남북교류 사업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은 배제되어왔다.

박호형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 간 장애인 스포츠 교류와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 민족 평화축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 위한 전부개정조례안



김희현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이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 있는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행정협의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직업·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 협의 항목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위원의 수는 현행 10명 이

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장, 시장도 지명할 수 있게 했으며, 정기회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했다.

김희현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는 소통과 협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양 기관 간 협업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기에, 정례회는 연 1회로 하고 별도의 협의 사항은 수시 임시회를 통하는 것이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실무협의회의 충분한 사전 조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근간으로 예산 편성 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12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수장 간의 교육행정협의회가 원만히 적기에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 조례안



문종태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제4조(면세물품의 범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범위를 미술품까지 확대 포함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례규정 제4조 면세물품의 범위에서 제17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물품" 조항을 근거로 마련됐다.

문종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 발의를 통해 JDC 면세점과 JTO 면세점에 '제주 아트 스페이스'를 구축하여 공방이나 중문 면세점 이용객들이 제주작가 미술품을 감상하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시시설이 다중시설에 포함되어 그동안 작품활동과 전시활동이 힘들었고, 전시한다 해도 관람객이 거의 없어 관람객과의 소통의 장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세점의 미술품 감상과 쇼핑은 제주작가와 미술품의 판로와 홍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진정한 '제주 문화예술의 섬'으로서 제주문화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 확대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김장영 교육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교육의원(사진·제주시 중부)이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지원사업 범위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체육관련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사업과 학생 선수들의 진학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장영 교육의원은 "학생선수의 진학 및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전문성을 함양하고, 전문체육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상위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 육성 활성화 조례안



양영식 위원장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마이스산업 육성 정책 및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제주 마이스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제주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마이스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마이스산업 정의, 도지사의 책무,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마이스 통계조사,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 공무원의 파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지원 조례



오영희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사진·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적·법적 권리 보호를 지원하고 있는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년발달장애인 및 치매환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영희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공공후견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결음마 단계이기에 성인발달장애인과 증가하는 치매인구 그리고 고령화 속도를 감안했을 때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전통적 가족의 보호 기능 약화에 따라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사실상 방치되거나, 착취나 학대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후견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읍면 중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김창식 교육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교육의원(사진·제주시 서부)이 도내 읍면에 소재한 중학교 학생의 통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읍면지역 학생의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지역 간, 학

교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교육사업과 연계 지원하여 읍면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난 2020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무교육 대상인 읍면 소재 중학교의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주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관광매력성’ 향상해야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13차 정책토론회 마련



의원연구모임인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대표 오영희 의원은)은 2월 14일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매력성 향상

방안’을 주제로 제1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김형길 원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관광매력성이란 관광객이 가진 욕

구나 동기를 충족시키도록 활동을 이끌어내는 자원을 말한다”며 “관광객들이 가지게 되는 전반적인 신념이나 느낌 등과 그러한 매력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결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의 관광매력성은 과거부터 남아있는 전통시장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중심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본질적 매력성과 그곳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 색다른 매력성을 만들어내는 힘인 변형적 매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국상인연합회 제주지회 최용민 회장은 “상인들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전문인력을 충원해 관광의 친절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레길을 관통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김영철 회장은 서비스 교육의 필요성, 식자재 부분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매출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관광정책과 정순 팀장은 “관광의 영역에서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도정에서는 불만제로 운동 등을 통해 품질, 가격, 친절서비스 등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섬 지역 여객선 도선 운임 지원방안 모색

오영희 의원, 정책간담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월 4일 추자면사무소에서 추자도를 포함한 섬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및 도선 운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강원복 추자면주민자치위원장, 신국철 추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금충 대서리장, 윤보선 묵리장, 박기선 예초리장, 도 해운

항만과 김용덕 팀장, 김진성 추자면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희 의원은 “추자도의 의료 환경이 열악해 병원을 왕래하거나, 각종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추자도 주민들에게 여객선 교통비는 부담”이라며, “이는 본섬으로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여객선이라는 점에서 제주 본섬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민에 비해 교통비 부담이 높아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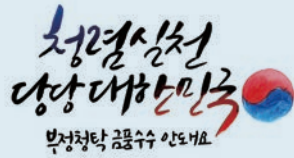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섬 주민 대상으로 한 지원기준 마련, 간접지원 방식



의 운임지원금 지급방법,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업무협약 체결 및 홍보 등으로 구성하여 추

자도 주민뿐만 아니라 우도, 가파도, 마라도 섬 주민까지 포함하여 지원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청탁금지법 Q&A



Q ○○부처 국장 A의 자녀 B가 ◇◇공기업에서 실시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에 응시하였는데, A는 해당 공기업 인사담당자 C에게 자신의 자녀 B가 응시하였으니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C는 B의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B가 합격했다면 A, B, C는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B는 A에게 인사청탁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가정

A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인 자녀 B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자녀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공기업의 인사담당자인 C는 A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A의 자녀 B가 채용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생활 & 법령뉴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Q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A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신기한 제주어 ⑭

오망오망하다

(동사) 올망졸망하다

<예문>

그 시간은, 오망오망한 손지덜광 식솔덜 브레멍 눈그득 웃이는 아방광 식솔덜 무음이 든 펜안허여지는 어느 그슬, 차근한 빗주제도 몇 번 삐여덜기고 선선한 부름이 빙완을 훑앙 들어오곡 하는 초추낙 그리라십주.

- 손지덜광 식솔덜 : 손자들과 식구들
- 브레멍 : 잠깐 내리는 비
- 웃이는 : 웃는
- 눈그득 : 뿌려다니고
- 무음이 : 가을
- 선선하다 : 아주 서늘하다
- 그리라십주 : 무렵이었지요
- 차분하다 : 차분하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월별	회수	회기	의사일정	주요 처리 안건
계	10회	총 141일 •정례회 2회/58일 •임시회 8회/83일	본회의 33일 상임위 54일 예결위 18일 공휴일 36일	
2월	제402회 임시회	2.8.(화) ~2.17.(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3월	제403회 임시회	3.22.(화) ~3.30.(수)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4월				
5월				
6월	제404회 임시회	6.14.(화) ~6.21.(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7월 ~ 8월	제405회 임시회	7.1.(금) ~7.6.(수) (6일)	본회의 3일 상임위 1일 공휴일 2일	•의장·부의장 선거 •제12대 의회 개원식 •원구성 등
	제406회 임시회	7.12.(화) ~7.22.(금)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공휴일 2일	•주요업무보고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제407회 임시회	7.26.(화) ~8.5.(금)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4일 공휴일 2일	•제1회 추경예산안
9월	제408회 제1차 정례회	9.16.(금) ~10.12.(수) (27일)	본회의 8일 상임위 5일 예결위 4일 공휴일 10일	•도정·교육 행정질문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10월	제409회 임시회	10.18.(화) ~11. 9.(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행정사무감사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10회 제2차 정례회	11.15.(화) ~12.15.(목) (31일)	본회의 8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8일	•도정·교육 행정질문 •2023년도 예산안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12월	제411회 임시회	12.19.(월) ~12.23.(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제2회 추경예산안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9일
※ 연간 의사일정은 현안사항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굴피 재발견 통한 감귤산업 위기 극복

감귤산업은 제주 경제성장을 이끌며 제주 농촌경제의 버팀목으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감귤 생산량에 비해 소비가 줄어들고 수입과일 및 하우스 재배 등으로 겨울철에도 다양한 과일이 공급되면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새로운 소득작물로 기존 시설 하우스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일부 변형해 감귤재배를 실시하면서 제주감귤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가공식품으로의 판매 활로도 찾고 있으나, 가공용 감귤의 경우 음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과자류나 건조과일 등도 생산하고 있지만 가공용 수매 감귤의 양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매되지 못한 감귤 및 상품성이 없는 감귤의 경우 폐기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도가 떨어지거나 상처를 입어 상품성이 없는 감귤의 경우 폐기해야 하는데, 감귤은 과즙이 많아 태울 수



이 경 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도 없고, 산도가 높아 음식물쓰레기로도 활용할 수 없어 매립해야 하지만, 도내 감귤 매립장의 경우 포화상태에 있어 감귤폐기물 처리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감귤산업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생각의 전환을 하면 그 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아직까지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자원이 있는데, 바로 굴껍질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따르면 감귤은 단순 식품을 넘어 건강기능식품 또는

음식물쓰레기로도 활용할 수 없어 매립하던 굴피를 이용한 제품은 차, 화장품, 주류 등 영세업체 출시 상품 불과

의약외품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 소재는 알맹이가 아닌 바로 '껍질'에 있다. 이미 굴피의 항산화, 항비만 등 그 효능과 관련한 검증된 연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굴피는 '진피'라 하여 한의학에서 요긴하게 써왔고 현재도 가장 많이 쓰이는 약재 중 하나이다. 굴피는 정제된 기를 돌리는 이기약(理氣藥)에 속해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더 없이 좋은 약재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제주의 굴피 연간 생산량을 보면 일반 굴피는 약 1000t, 친환경 굴피는 약 20t 정도 된다. 굴피를 이용한 제

품은 차, 화장품, 주류 등이다. 기능성 제품은 출시되지 않았고 대기업 제품은 거의 없어 대부분 영세업체에서 출시한 상품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국의 신후이 진피촌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신후이 출신 한 사업가에 의해 약 10만㎡ 규모의 생산·가공·판매 시설인 진피촌을 조성한 후, 신후이 진피 시장가치가 1억 위안(170억 원)에서 2017년 60억 위안(1조 원)으로 60배가 상승했다.

중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과수 시장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제주 감귤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버려지는 굴피를 활용한 산업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실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잔류농약 제거 등 굴피의 안전성을 높여 굴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제주 굴피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 감귤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는 것은 어떨까?

코로나19 유감, FTA 유감

'굴화위지(橘化為枳)'라는 말이 있다. 남쪽의 귤나무를 북쪽으로 가 심으면 탕자가 된다는 이야기다.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자라나는 환경이 중요하다. 제주 농업이 특화성을 갖는 이유도 이런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작물의 월동이 용이하고, 육지부와 다른 작부체계로 인해 타 시·도보다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런 제주 농업이 흔들리고 있다. 태풍의 길목에서 자연재해의 잦은 발생으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날씨가 좋아 생산량이 늘어나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제주의 영농비용과 농가부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농업경영비가 호당 4000만 원, 농가부채가 8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제주 농업의 특화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볼 수 있다. 제주를 대표하는 월동채소 중 하나인 양배추를 살펴보자.



송 영 훈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제주의 주력 산업.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이야말로 제주의 미래로 가는 길라잡이...

올해 전국적으로 겨울 양배추 재배면적이 2988ha에 17만 1000t이 생산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주지역 비중이 64%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36%는 육지부에서 생산된다. 제주의 생산비중이 높지만 토질과 물류비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한다면, 육지부에서 출하되는 양배추의 경쟁력이 제주산보다 높을 것으로 본다.

육지부에서 겨울 양배추 생산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기후 전문가들은 한반도 기온이 1℃ 상승할 경우 작물 재배 가능지역이 97km 북상한다고 한다. 제주에 딱 걸쳐졌던 작물재배 북방한계선이 육지부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감귤과 월동채소로 대표되었

던 제주 농업의 특화성이 감소하고 있다. 따듯해진 기후에 맞는 열대·아열대 과수를 재배하는 것을 대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힘들어 보인다.

올해 발효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현재 제주에서 주로 재배되는 감귤 품종을 육종한 일본과의 첫 FTA이며, 이미 FTA를 체결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더 큰 폭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열대 과일류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열대 과일 재배가 많지 않은 만큼 국내 농업에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제주 농업의 특화성이 점차 사라지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 선택에 있어서 아열대·열대 과수와 작목들은 이미 외국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제주 농업은 어떻게 가야 할까? 무엇보다도 제주 농업의 관점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제주 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농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업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에서 농업을 대신할 산업이 마땅치 않다. 제주의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관광산업과 궁합도 잘 맞는다. 또 다른 이유는 도서지역인 제주의 지속성 관점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농사로 뒷바라지를 해온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이기에 더욱 그러한지도 모른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이야말로 제주의 미래로 가는 길라잡이가 아닌가 하고 자문해 본다.

통합복지하나로 2차 시범사업 추진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은 제주도 보건복지부가 민·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는 차세대보장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2년 동안 1차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2022년도 2차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사업을 했던 주민센터 3개소를 포함해 읍·면 지역으로 확대해 2월부터 박차를 가한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원받았던 대상자들로부터 서비스 품질, 서비스 만족도, 행복감 부분에서 평가결과가 높은 편으로 조사됐고 복지관과 협력 영역에서도 기존 전달체계와 비교해보면 복합적인 문제들이 개선됐다.



김수정
제주시 아라동
맞춤형복지팀장

아라동주민센터는 제주형통합복지하나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사례관리 모델 운영, 공동사례관리, 타 사례관리사업의 연계, 지역공동

아라동주민센터
제주형통합복지하나로
1차 시범사업에 참여...

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복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고 확대된 2차 시범사업에 참여가 확정돼 제주형 복지서비스 인프라 완성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아울러 사람중심, 현장중심, 민·관 협

업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부터 전체 도민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예방적 대응 업무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분절적인 서비스의 전달체계 한계, 복지사각지대 문제, 민·관 협력 및 자원 공유의 숙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에 취약한 대상을 위한 현황조사, 지역사회 문제 파악 및 진단 등 다양한 제도 위에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이 안착된다면 제주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예방적 복지 실현이 앞당겨질 것이라 기대해본다.

주방 화재 멈추는 'K급 소화기'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코로나 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방역수칙도 조정돼 외식보다는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가정들이 많아졌는데, 자칫 잘못하다간 주방은 행복을 만드는 곳에서 한순간에 위험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

주방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K급 소화기가 필수적으로 배치돼 있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주방을 뜻하는 영어단어의 Kitchen의 앞자를 딴 소화기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전용 소화기다.



손형곤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주방 화재의 대부분은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는데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순식간에 발화가 일어나며 불을 끄더라도 자체 온도가 높아 재발화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 한순간에 재앙을
불러오지 않도록 K급
소화기가 필수적으로
배치돼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식용유 화재 발생 시에는 일반 화재처럼 물을 부어 소화를 시도하거나 건물 내에 배치돼 있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 등을 방지한다.

이런 이유로 화재안전 기준을 개정하여 주방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시행해 오고 있지만 일반 가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잘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 한순간에 재앙을 불러오지 않도록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행복하고 안전한 주방을 만들기 바란다.

비타민A의 황제 '당근'

당근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를 내고 노화방지 및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한 루테인, 리코펜 성분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효능이 있으며 면역력 향상은 물론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이에 당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매일 아침 당근주스 한잔을 추천한다. 싱싱함을 그대로 맛볼 수 있는 착즙은 몸을 해독시켜주는 개운함을 준다.

두 번째로 권하는 방법은 샐러드용



한윤아
제주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당근 절임이다. 요즘 식탁에 많이 오르는 샐러드용 당근을 소개하자면 우선 당근을 최대한 가늘게 채 썬 후 달지 않은 겨자소스, 올리브유, 레몬즙, 설탕을 넣고 소독한 병에 담아 냉장고에

항산화, 노화방지 및 암
예방, 눈 건강에 효능...
면역력, 고혈압, 동맥경
화를 예방하는 효과

서 하루 정도 숙성시켰다가 각종 샐러드에 함께 곁들이면 고급스러운 샐러드가 된다.

세 번째는 당근 스크램블이다. 당근을 얇게 채 썰어 약간의 소금과 기름을

넣고 볶는다. 어느 정도 볶아지면 잘 풀어놓은 계란을 넣고 휘휘 저은 후 접시에 모양을 내서 담아내면 된다. 당근의 단맛과 계란의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는 것은 물론 당근의 비타민, 계란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좋은 식단이 될 것이다.

추위가 기승하는 것을 보니 봄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새롭게 농사를 준비하는 농업인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당근 농사를 짓는 어머니들의 입가에도 웃음이 가득 번지기를 바라면서 당근 소비를 기대해 본다.

“지방자치 직접 체험, 도의회 역할을 새겼습니다”

2022년 상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내 대학생의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대학생 체험활동 인턴제를 운영했습니다.

대학생의 의정활동 참여로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는 의견과 의정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경력으로 인

정받을 수 있어 의미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턴제에 참여한 제주도내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업무를 이해했으며, 특히 자치입법 및 정책자료 조사를 통해 입안 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고, 본회의 방청으로 실제 의정활동 결과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체험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의 체험기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는 한편, 학교 현장

과 의회의 소통을 확대해 교류하고 협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책 입법업무 경험, 큰 보람”



김두아 제주대 행정학과

저는 2022년도 1월 한 달 동안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턴 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 관련 입법 및 정책 자료 수집과 정책제안서 작성, 정책분석팀 업무 보조를 통해 정책입법담당관실의 역할을 체

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책분석팀의 통계 자료 작성을 보조하는 업무를 통해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과정을 거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제안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구성하여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간에는 주로 제주도 경제와 전국 시도별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데

이터를 시계열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박사님과 연구원님께서 사드 사태와 코로나19가 제주경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주셨고, 제주의 경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연구원 등 입법기관 및 지방자치 연구기관에서 입법 및 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해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찾아보면서 정비해야 할 부분을 고민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읽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였지만, 제주도 정책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시도의 정책들과 조례도 찾아보면서 지역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파악해볼 수 있었습니다.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많은 분께서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조언해주신 덕분에 잘 배우고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의 신분으로 제주도의회라는 공간에서 정책입법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었던 보람찬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대학서 배운 것 실제로 해보는 것 의의”



송준혁 제주대 행정학과

처음에 현장실습을 1달간 한다는 소식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앞섰다. 학과와 관련된 일을 해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현장실습이 부담이었다.

하지만 실습 담당자님뿐만 아니라 정책입법담당관실의 모두가 잘 지도해주신 덕분에 그러한 부담과 걱정이 덜했다. 덕분에 현장실습을 통해 얻는 작업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좀 더 잘 이루어진 것 같다.

실습 과정에 했던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 가지는 정책 보고서 작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통계 정리 및 작

성이었다. 두 가지 모두 어려운 일이 아니면서도 배울 점이 많은 작업이었다. 정책 보고서 작성의 경우는 대학에서 배웠던 과정을 실제로 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작업이었다.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피상적이고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작업이었다. 통계 정리 및 작성의 경우는 기본적인 통계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를 어떻게 찾고 또

이용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받았기에 이번 실습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고, 또 정책입법담당관실 모두에게 감사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통계 정리 및 작성의 경우는 정책 보고서 작성과 달리 가이드라인 없이 지도를 해서 초반에 조금 헤맸다.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있다면 다음 인턴의 경우는 헤매는 일 없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도민에 대한 자세 배운 소중한 경험”



한미진 제주한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나의 꿈은 호텔리어다. 그래서 호텔경영학과에 재학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하게 된 의정 인턴 체험 역시 그 노력 중 하나였다. 지금까지 나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왔던 것 같다. 갑자기 AI

로봇을 만들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적도 있고, 여러 글쓰기 공모전에도 나가보고 중국어로 인사도 못 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중국으로 가 4개월 동안 공부한 적도 있다.

인턴체험 첫 출근. 원래 출근 시간보다 한 시간을 일찍 출근했다. 담당자분은 잔뜩 긴장한 나에게 사무실 직원분들을 소개하며 따뜻하게 반겨주셨다. 첫 출근 당시의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

다. 의회 직원분들과 의원분들께 인사를 드렸다. 다들 정장 차림에 가슴 쪽에 배지를 하나씩 달고 계신 모습이 대학생인 나에게는 낯설었다. 인사를 마친 후 총무담당관실에서 인턴체험 활동을 하게 되었다. 대략 법안 내용을 다운받아 한글파일로 편집하는 일을 맡았는데, 과제를 사흘 정도 했던 것 같다. 그 밖에도 총무담당관실의 업무를 보조하며, 도의회의 업무를 조금씩 파악할 수 있었다. 인턴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을 알 수 있었고, 의회가 도민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며 조례를 만들고 이

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턴체험을 마무리하면서는 자신감도 생기고, 친절한 태도가 새겨지기도 했다.

우연히 알게 되어 신청한 의정체험이 대학생인 나에게 큰 경험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체험이 학창 시절의 좋은 경험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공무원이나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친구라면 더욱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수고한 나 자신에게 고맙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제주 찾는 이들 최소한의 책임 나눠 가져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위성곤 국회의원, 도의회 행자위·환경도시위 공동 마련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의 불씨가 당겨진 것이다.

위성곤 국회의원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대회의실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의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가 그 빚장을 쉽게 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꼼꼼하고 치밀한 법률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날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부과금관리기본법의 취지와 현

황 등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부과 대상과 특정 공익사업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세 등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목적세의 경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납세 능력에 따라 부과되지만, 부담금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의 경우 이른바 ‘입도세’와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도.

따라서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재원 조성 필요성은 물론 사용 목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 부담금을 신설·변경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자체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심사를 요청,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말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는 제주도지사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입도객을 대상으로 1만



원 이내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제주도민과 도내 행정기관·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법인·단체 등 임직원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체적인 징수 방법과 납부 기한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TF팀도 지난해 구체적인 환경보전기여금 징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숙박시설 이용 시 1인 1박 기준 1500원, 렌터카의 경우 승용차 5000원, 승합차 1만 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환경보전기여금 사용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 제시됐다.

“코로나 상황, 민생경제 회복 특단 대책 필요”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1년 6개월 다양한 활동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2월 7일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난 2020년 7월 28일 구성되어 1년 6개월 동안 활동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민 위원장의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성과와 향후과제’에 대

한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김남진 제주관광협회본부장, 김명호 민주노총서비스연맹 택배노조제주지부장, 김성남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장, 문종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귀포센터장, 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영식 제주대 강사가 참석해 토론이 이뤄졌다.

강성민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많은 도민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린 상황으로 도정에서는 기금, 순세계 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기 추경예산 편성과 신속한 집행, 상하수도 요금 감면, 매장 카드 수수료 지원, 주차단속 유예



등 생활 속 지원 방안 마련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가칭 ‘위드코로나대응 및 일상회복특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가칭 ‘민생경제포럼’을 구성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특위 활동을 통해 발굴한 정책 과제들은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 모색 나섰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최
고현수·홍명환 주관 토론회 개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주최하고,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월 19일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은 “과거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하신 분들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놓은 분들이 있어 이제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허진수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가 지난 2020년 8월 경남 봉하마을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11월 출범 이후, 민주화유공법 제정 노력 및 10개 시도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끌어 냈다”면서, “며칠 전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아들 이한열의 곁으로 가신 배은심 어머니의 뜻이 바로 민주화에 몸 바친 사람들이 유공자로서 대우받아 역사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다 함께 민주화의 길을 걸어갈 때 멀리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고현수 의원은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보상 등을 받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은 미미한 상



황”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서울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두운 과거를 조명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사회가 보듬어야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해원 교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무가 국가사무에 가깝지만 주민의 복리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각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민주유공자의 유공을 근거로 한 보훈적 차원의 예우나 지원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급여적 성격의 생활지원금에 가깝고, 급여지급도 강행규정이 아닌 ‘지급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법령 등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등 지원범위가 협소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명환 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이 국회 계류된 상황이지만 국회의 틈을 메꾸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고, 타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비



교하면서 일단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수 대표는 “전체적으로 민주화유공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현재 상위법이 민주화보상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고, 향후 어떤 법률을 상위법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대상 범주 및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중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암울했던 과거사를 되돌아보면서 국가 폭력으로부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도 당연히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되고, 이는 예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실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역사와 국가공동체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3지원과 강민철 과장은 “민주화유공자법이 입법화되어야 명칭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현재 민주화보상법을 근거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조례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복지원은 제외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현수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특히 도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많은 의견들을 검토하여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포럼 전문가 강연, 임시총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재정경제포럼(대표 이경용)은 1월 19일 대회의실에서 ‘최근 대내외 금융·경제 현황 및 2022년 제주경제 여건’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현황과 2022년 전망에 대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종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자문관은 강연에

서 2021년 제주도 주요 산업별 동향 및 대내외 금융·경제 현황과 향후 제주경제 전망을 다뤘다. 이종한 강사는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제도팀을 거쳐 은행분석팀, 시스템리스크팀 팀장을 역임하고 202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어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2021년 재정경제포럼 활동실적과 2022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40년 된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 바꾼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40년 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도입되어, 충성을 강요하며 장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선서문’이 개정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1981년 도입된 이래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선서문은 군사정권이 들어선 1981년 11월 13일 당시 대통령이 60만 전 공무원으로부터 복무자세를 다짐하는 5개항의 복무선서를 받으면서 최초 도입됐다. 이후 1983년 3월 30일 시행된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선서문이 신설되면서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고, 지방공무원은 각 시도 조례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의 선서문을 반영하여 시행했다.

그런데 선서문의 내용에 ▲‘신명(身

命)’을 바친다는 다짐이나 ▲복종을 강요하는 듯한 표현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되새기도록 간명하게 개정됐다. 이에 2010년을 전후로 전국 16개 모든 시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선서문의 내용을 개정하였고, 최근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의 회도 이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고, 최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역시 도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40년 전 선서문을 그대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상봉 의원은 “40년 전 조례 내용을 단 한 번의 개정 없이 방치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공무원 선서문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도록 하는 한편, 사문화되고 방치된 조례들을 전수 조사해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2022년 정기총회 개최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 부의장)는 2월 7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정민구 부의장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곤란했었지만, 정책간담회 및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면서, “2022년

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연구단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남은 기간도 활발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의원들은 2021년 활동결과 및 2022년 활동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 새로운 12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중·고등학교 특수교육 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제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의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의원)는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대표의원 고현수)과 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아이(대표 박정경) 공동주관으로 ‘제주 중등 특수학급·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토론회’를 지난 1월 2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

아이’의 박정경 대표가 ‘2021 제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특수학교 교육환경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한영진 의원은 “제주 특수교육 환경은 ▲학급과밀 현상 ▲직업교육 ▲학교구성원의 장애인식 ▲개별화교육의 고도화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제주 특수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어 박물관 추진 국립한글박물관 현장방문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사라져 가는 제주어의 보전·육성을 위한 ‘제주어 박물관’ 추진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관련 시설을 찾았다. 강 의원은 국립한글박물관, 김해시 한글박물관, 서울시 우리소리박물관을 방문해 전시시설을 살피고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제주어 박물관 설립 전략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 강 의원은 “제주어는 우리 제주의 영혼과 다름없으며, 제주어의 가치는 언어 그 이상의 제주인의 삶과 문화가 깃든 중요한 역사”라고 소개하며, “언어의 가치 그 이상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한 서울시 우리소리박물관, 김해시 한글박물관 관계자들의 노력이 제주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이 만든 조례안, 청구절차가 쉬워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시행(2022.1.13.)됨에 따라 그간 자치단체장에 제출하였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기관인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되어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낮

췌고, 특히, 지난 8일부터 주민참여 비대면·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좌남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으로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조례 발안 활성화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